

ISSUE BRIEF

여시재 - 협력연구기관 공동 기획

트럼프 제조업 부활 공약 분석

**미국의 제조업 부활에 대한
중국의 견해**

2017. 04. 16

서정경(성균중국연구소)



트럼프 미대통령의 핵심 공약 “미 제조업 부흥”에 대한 중국의 관심이 뜨겁다. 제조업이 2차대전 이후 미국 국력의 비약적 성장을 이끈 원동력 중 하나라는 점에서 “미국우선”을 내걸은 트럼프의 제조업 활성화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글로벌 강대국을 엿보는 중국의 입장에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관방 및 전문가들의 대체적 반응은 부흥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것이다. 미국 기업의 해외 이전 현상은 금융제국 기득권을 누려온 미국이 기존의 시스템 속에서 필연적으로 안게 된 ‘구조적 문제’로서, 이것을 극복할 여력이 충분한지에 대해 평가가 후하지 않다. 여기엔 애플 핸드폰 기계를 미국에서 제조하려면 생산라인 하나 구축하는 데 필요한 8,700여명의 엔지니어와 10만명 넘는 기술자를 중국에선 2주면 모집할 수 있지만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미국에선 9개월이 걸린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일찍이 2012년 오바마가 미 제조업 부활을 위해 해외자산에 대한 증세, 해외은닉재산 및 부정수입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 등을 추진했을 때에도 약 200여개에 달하는 미국 기업들이 잠시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이후 다시 해외로 빠져나간 사실도 이를 뒷받침 한다. 제조업 적자와 서비스업 흑자라는 기본적인 구도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제조업 부흥 계획의 효과는 크지 않고,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명령이나 제재 같은 강경입장을 지속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야기될 거라는 전망이다. 후안강(胡鞍钢) 청화대 국정연구원장은 심지어 “미국의 ‘제조업 귀환’은 가짜명제(伪命题)”라고 단언했다.

이러한 중국의 심드렁한 반응은 미국에 대한 객관적 평가 외에도 중국이 현재 제4차 중국판 산업혁명을 추진하며 세계 제조강대국을 지향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국무원이 재작년 제시한 ‘중국제조 2025’에 따라 중국은 이미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 제조업 관련 주요 지표를 설정하였고, 장기적으로 제조강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3단계 발전전략을 구축하였다. 여기에는 인건비 상승 및 저성장 시대에 들어선 중국이 인터넷 +와 제조업 간 융합발전을 통해 민간 창업을 활성화 하고 장기적으로 세계 최강대국으로 성장해나가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이런 중국에게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계를 드러낸 미국의 제조업 부활 및 성장동력 장악은 그다지 달가울 리 없다. 미국의 산업정책 전반에 ‘미국우선(America First)주의’가 내재해 있다는 사실도 중국의 입장에선 불편하다.

물론 중국이 미국 제조업의 객관적 수준을 낮게 보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인공지능 로봇, 3D프린터, 디지털 설계기술 등 정보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앞서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을 비교적 관점에서 보고 중국의 우위를 강조하는 견해들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이펑(易鹏) 반고싱크탱크 이사장, 과학기술부 중국생산력촉진센터 협회 부이사장盘古智库理事长、科技部中国生产力促进中心协会副理事长)은 중국이 미국보다 강한 분야로 인력자원, 토지, 물류, 에너지, 자금을 꼽았다.



글로벌 경제 침체기를 맞아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장기적으로 제조업 일자리의 지속적인 감소라는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제조업 혁신, 산업체질 업그레이드라는 국가적 과제를 등에 업고, 공급측 개혁과 일대일로 등을 추진하는 중국의 발걸음이 바빠질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미국제조’, ‘유럽제조’, ‘중국제조’를 넘어 ‘글로벌 제조’가 트렌드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증대하고 연동성이 강화된 시점에서 미국의 보호주의를 비판하는 중국의 자국 산업 정책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